



신뢰와 책임, 사반세기 묵은 숙제 풀기 위한 공론화 본격화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한 게 핵심

조성경

명지대 자연교양학과 교수/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



고려대 언론학 박사
아주대 에너지공학 박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에너지위원회 위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심사위원회 에너지환경
전문위원회 위원
에너지영리더스포럼 좌장

전 국민을 상대로 계획에 따라 1년간 공론화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88년 7월 제220차 원자력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을 1995년 2월 말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을 1997년 12월 말까지 건설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원자력위원회는 제221차 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계획을 의결했습니다. 3,000톤 규모의 습식 저장 방식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등을 150만평 규모로 임해 지역에 2000년까지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일방적인 경향이 강했고, 무리한 부지 확보 추진은 반핵 정서를 태동했습니다. 불만과 저항,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언론의 경쟁적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없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정당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 국내외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하고,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소내 저장 능력을 확충하여 각 원전의 부지 내에서 관리, 중간 저장 시설 건설 후 단계적으로 이송, 집중 관리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첫 의결이 이루어진 뒤 사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국민과 안전 사이에 등호를 넣을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는 물론 언론과 국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론화 실행계획’ 구성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2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 위원회는 2014년 말까지 활동 기한이 잠정적으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국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3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론화의 목적, 기본 원칙, 논의 주제, 논의 방법, 공론화 일정을 포함한 '공론화 실행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세칙 제15조에 의거, 위원회가 구성된 2013년 10월 30일부터 3개월 시점인 2014년 1월 29일 실행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법적 근거와 역사성을 토대로 수립한 이 계획은 '열린' 모습으로 '상시' 실행될 예정입니다.

실행계획은 공론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본 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3개월 동안 수 차례의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6개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한 학습, 국내외 관련 시설 견학과 담당자와의 간담회, 공식적인 회의 차수에 포함되지 않는 서른 시간 이상의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련 논의는 항상 '사용후핵연료'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한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공론화의 목적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라는 문장에 위원회의 철학이 녹아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이란 문장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담았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게 핵심 책임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 원칙 준수

기본 원칙은 공론화 과정 중 모든 논의 참여자가 지

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참여자는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책임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과 기본 원칙에 따라 현황 파악-현안 도출-의견 수렴-평가 및 분석-권고안 구성의 절차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 전문가, 이해 관계자,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시민 사회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현안별, 의견 수렴 대상별, 논의 단계별 최적의 방법을 찾아 의견 수렴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국민의견수렴센터를 운영하고, 여론·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언론 포럼,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 시민사회포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을 최선의 정책 생산을 위해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오히려 동력으로 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공론화 기본 원칙은 2008년 4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에서 제시한 PRESIDENT-rules를 기초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재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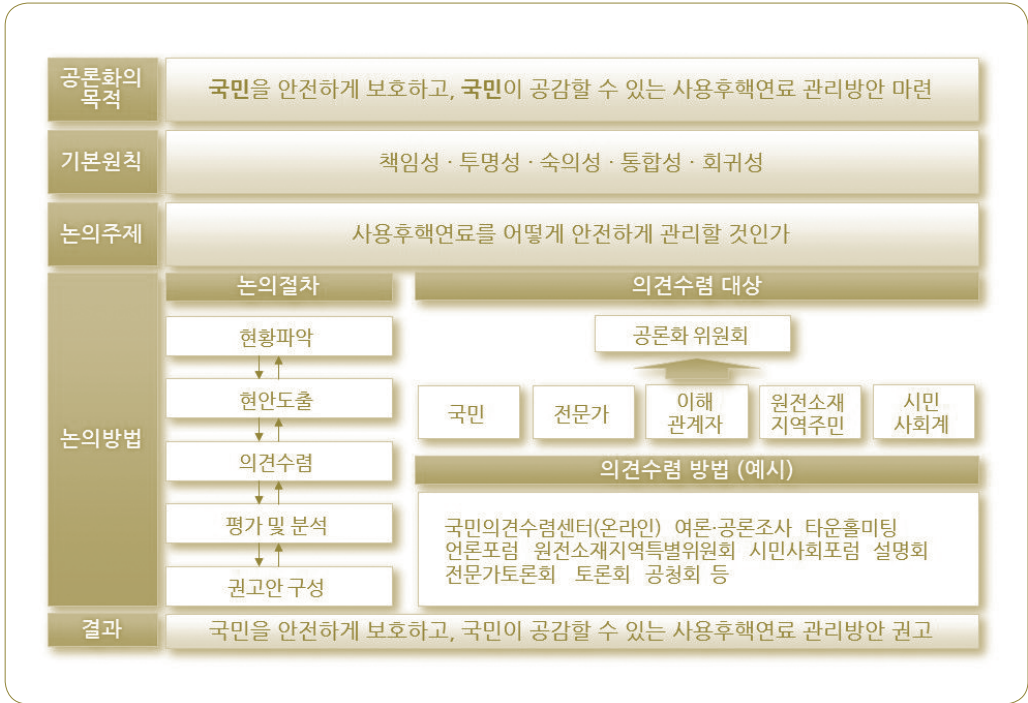
책임성은 '국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을 존중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명성은 공론화 진행 사항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장벽 없는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의성은 참여자는 합의적 공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학습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성은 기술 공학적 측면과 함께 인문 사회, 법제도적 측면 등 다양한 시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귀성은 논의 과정에서 혹은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후이라도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을 경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추진 방향과 일정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열린 주제로 공론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논의라도 제한 없이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첫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상위 정책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존중할 것입니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와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본 원칙과 방향만을 검토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셋째,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두 번의 대정부 권고가 있었습니다. 논의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감안하여 그 권고를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기술,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

관리 현황에 대한 객관적 확인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산업부 장관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방사성폐기물 발생과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저장 가능 시점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에 대해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연구 개발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재처리, 재활용, 최종 처분 등 장기 관리 기술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연구 개발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용성, 경제성, 윤리성 등 사회적 관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국내법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의는 기술 공학적 안전성을 대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

현황 파악 후 이를 바탕으로 현안을 도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선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은 어떠한지, 저장 용량 초과분을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재활용 혹은 재처리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은 어느 수준인지, 최종 처분은 언제, 어떻게, 누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층 검토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 검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검토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심층 분석된 결과를 상호 연계하여 최종 검토하고 관리 방안의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의견 수렴은 실질적으로 공론화 전 과정에서 이루어 집니다. 현안의 내용과 성격, 주요 이해관계 등을 감안하여 의견 수렴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 개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평가 지표에 의해 정량적으로 우선 평가한 후, 현실적 여건과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내부 토론과 심층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평가 지표는 주요 국가에서 사용한 지표를 총망라하고, 이 중 국민이 중시하는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전성은 불변의 영순위입니다.

권고안 마련, 정부 제출

평가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은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구성하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리 방안의 이행과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 등도 담을 예정입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산업부 장관에 결정에 따르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2014년 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행계획은 공론화의 전 과정을 2014년 말까지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습니다.

4월 초까지 의견 수렴 체계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것이며 10월까지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공론화 책무는 일단 마감됩니다.

‘公論花’를 활짝 피우기 위해

‘공론화(公論花)’를 활짝 피우기 위해 이제 겨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있는 비옥한 토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양을 바꿀 순 없습니다. 한 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심한 신경과 뜨거운 애정이 이 필요하고 역할에 맞는 참여가 중요합니다.

‘열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보호’를 최고 가치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제한 없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든 비판이든 정보 제공이든 혹은 감정 표현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국민들이 공론의 장에 펼쳐주어야 씨앗이 발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마음을 모아야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의 의지를 발휘해야 비로소 ‘公論花’를 피울 수 있습니다. 신뢰와 책임, 이 두 단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